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화학무기금지협약 추진의 난맥상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화학제품은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성과 유해성이 혼재하는 물질로, 백지장 한장의 차이로 극단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계 화학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선진국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개발도상국의 화학제품 생산이 활기를 띄기 시작, 산업 발전에 걸맞는 유해성 시비 및 환경오염에 대한 경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학제품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유통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구환경의 오염 및 유해한 사용이 증가해 그 사용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장본인들이 선진공업국들이고, 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흥공업국들에게 책임의 상당부분을 전가시키는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은 책임전가의 수준을 넘어서, 앞선 기술을 십분 이용해 환경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환경관련 협약 및 국제회의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이고, 우리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뿌리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일상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거나 제조가 가능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계속되었던 동서양극의 갈등으로 인한 대규모 전쟁이 종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국지전이 계속되고,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화학무기가 속속 개발돼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학무기 제조·유통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의 준수 및 이행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세미나를 유치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널리 홍보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대응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여기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외무부가 국제세미나를 유치해 아시아에서 일본·중국·인디아에 이어 네번째로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정기적·비정기적 강제사찰이 시행된다고 볼 때 우리가 이사국으로 진출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국제적인 지위상승에는 그만한 댓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또 사전 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몇몇 화학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내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들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뿐 그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매우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당사자인 관련기업들의 무관심에 연유한 바 크지만,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방적인 행정주도의 대응에 머물렀기 때문일 것이다. 협약 체결후 및 이사국 피선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집행하고,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지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무기금지협약상의 해당 화학물질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할 경우 어떠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환경부에서 이들 물질에 대한 생산·유통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그 행정력이나 분석력으로는 전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통상산업부나 환경부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 자체의 조사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업, 민간연구기관이 협력해

화학무기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부주도의 행정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기업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화학저널 1995/6/5>